

반정부 시위의 정치동학 차이 비교: 한국의 4·19 민주항쟁과 버마의 샤프론혁명

양길현 | 제주대학교

이 논문은 저발전 사회의 반정부 시위가 정부구조의 재편이라든가 집권엘리트의 교체, 정부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의 반정부 시위 사례로서 4·19 민주항쟁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샤프론혁명의 좌절을 가르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

4·19 민주항쟁과 샤프론혁명을 비교함에 있어 이 논문은 우선 정치사회라는 구조적인 공간과 권력구조의 대내·외적 기반에서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1960년 4·19 민주항쟁과 2007년 샤프론혁명이 일어날 시점을 전후한 때의 한국과 버마에서 1) 정치사회의 활력 여부, 2) 군부의 정치화 수준, 3) 후원의존관계라는 3가지 구조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하고 있다. 특히 4·19 민주항쟁과 샤프론혁명이 교체 대상으로 삼았던 이승만정부와 망쉐정부의 경우 무엇이 유사한가보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치사회(정치변동)와 시민사회(반정부시위)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정치론적 접근의 지평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주제어: 반정부시위, 4·19 민주항쟁, 이승만정부, 샤프론혁명, 망쉐정부, 정치사회, 군부의 정치화, 후원의존관계

I. 들어가면서

한국의 1960년 4·19 민주항쟁(이하 4·19)과 미얀마의 2007년 ‘샤프론혁명’(이하 샤프론)은 반정부 시위라는 데서 유사하다. 둘 다 아래로부터의 항의와 도전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군사정부 내지는 민간독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 등 권위주의 정부의 횡포와 무능에 반

발하는 데서 시작하여 정치사회의 권력구조 및 집권엘리트의 변화를 의도하는 데로 나아가는 정치봉기라는 측면에서 샤프론과 4·19는 유사하다. 그러나 4·19와 샤프론은 시간적으로 근 50년의 차이에 이어 권위주의정부의 퇴진이라는 결과에서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집권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구조상의 특성 그리고 대외적 후견의존관계의 성격에서 많은 상이함을 보였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차이의 정치동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팅턴(Huntington 1991, 35)이 지적하는 바 “권위주의정권의 종식, 민주정권의 등장, 민주정권의 정착”이라는 3단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4·19는 권위주의정권의 종식에 이어 민주정권을 등장시키는 데에도 성과를 보인 운동이었다. 다만 4·19도 민주정권의 정착이라는 과제까지는 이루지 못하였는데, 한국에서의 그러한 과제는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을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려서야 비로소 달성되었다.

샤프론은 그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의 퇴진이라든가 군 지도부의 교체와 같은 어떤 가시적인 정치변동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점에서 샤프론은 4·1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좌절된 민주화운동으로 남는다. 그러나 딱히 샤프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버마정부가 2010년 다당제총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보면, 샤프론이 간접적으로나마 2008년 신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2010년 선거 예정 등 버마의 정치일정 변화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정치적 봉기로 보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¹⁾

4·19는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라는 놀라운 성과에 주목하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이후의 획기적인 사회변화가 있기를 갈망(정창현 2006, 37)”하는 기대혁명을 반영하여, 간혹 4·19혁명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4·19는 “이승만의 하야와 자유당의 몰락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제외하고는 1950년대 친일지주 지배의 사회구조와 반공·보수 이데올로기의 주도, 시장경제, 대미종속관계가 그대로 지속(양길현 2004, 24-25)”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구성의 전체적인 변혁을 수반하는 데로는 나가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민호 2001, 60)”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4·19를 민중혁명이라든가 시민혁명이 아닌

1) 샤프론혁명 이후 2008년 2월 194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안이 최종 마무리되었고, 이어 2008년 5월 10일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14만 명의 사망·실종과 240만 명의 이재민을 낳는 등의 심각한 재앙 상황인데도, 군사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외부원조를 거부하면서 신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총유권자 2,200만 명 가운데 98%가 투표에 참여하고 92.4%의 찬성으로 헌법안을 통과시켰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05/15).

정치봉기라는 측면에서 '4·19민주항쟁(정창현 2006, 43-44)'으로 칭하고자 한다.

샤프론은 전형적으로 군사정부의 실정에 분노하여 촉발된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이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감각적인 이름 붙이기를 그대로 차용하는 이유는, '연노란 색의 승복을 입고 떼를 이룬 승려들'로 상징되는 샤프론에는 "인터넷 블로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연결, 해산과 재조직 등 '치고 달리기'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잘 짜인 저항조직들(앵달 2007, 174)"이 함께 하는 역동성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버틸 린트너(Bertil Lintner)의 소망처럼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시작(Kingston 2008, 18에서 재인용)"으로서 샤프론의 역동적 미래 가능성을 심분 수용하고자 하는 필자의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2004년 '오렌지혁명'이라든가 그루지야의 2003년 '장미혁명'처럼 2007년 9월의 반정부 시위에 승려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 승려들의 연황색(샤프론) 가사를 시각화한 '샤프론혁명(Saffron Revolution)'이라는 호칭이 고유명사화 한 저간의 사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반정부 시위에서 차이가 많은 4·19와 샤프론의 비교인가? 우선은 반정부 시위의 촉발과 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서 매우 다른 상이점을 보이고 있는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제3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다. 동시에 4·19와 샤프론의 차이를 비교론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반정부 시위를 비교하는 3가지 변수, 즉 '정치사회'의 존재 여부와 군부의 정치화 정도 그리고 외부 강대국의 개입 수준이라는 3가지 변수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향후 저발전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3가지 변수의 설명적 유용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4·19와 샤프론을 비교하는 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바로 4·19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샤프론의 좌절을 비교하면서, 왜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는지의 구조적-맥락적 요인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 4·19와 샤프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틀

4·19와 샤프론을 비교함에 있어 이 논문은 우선 정치사회라는 구조적인 공간과 권력 구조의 대내·외적 기반에서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화의 구조적 조건들은 "연기자(행위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Sorensen 1994, 69)"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버마처럼 사회경제

적 또는 대외관계의 여건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시도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1960년과 1987년의 한국과 비교할 때 버마의 열악한 구조적 여건에서는 민주화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다. 또한 마르코스 이후의 필리핀 경험에서 보듯이 민주화의 구조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성립된 민주화 진전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허약하며 상처받기 쉽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물론 4·19와 샤프론은 다음과 같이 반정부시위의 목표와 지향이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1960년 한국과 2007년 버마는 주변부 저발전 사회라는 데서 공통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변동을 의도하는 4·19와 샤프론 모두 주변부국가에서 벗어나 반주변부 또는 궁극적으로 중심부 국가로의 이행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은, 저발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반정부시위는 단지 정치적 억압을 줄이는 데에 머물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해 나가는 발전국가를 공통으로 지향한다. 셋은, 시민사회로부터의 반정부 시위는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준비보다는 오히려 4·19에서 보듯이 부정선거라든가 부정부패와 같은 현실의 정치적·도덕적 불만이라든가 또는 샤프론에서처럼 식량부족이라든가 물가폭등과 같은 경제관리의 실패 내지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부의 불만이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의 오만과 불감증 또는 무능력으로부터 제기되는 만큼이나 그러한 반정부 시위의 목표는 특정 정부의 교체 내지는 특정 정치지도자의 거세를 포함하여 이른바 정치사회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게 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저발전 사회의 반정부 시위가 정부구조의 재편이라든가 집권엘리트의 교체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의 반정부 시위 사례로서 4·19의 성공과 샤프론의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1960년 4·19와 2007년 샤프론이 일어난 시점을 전후한 때의 한국과 버마에서 1) 정치사회의 상황, 2) 군부 기득권의 수준, 3) 후진국과의 관계라는 3가지 구조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4·19와 샤프론이 교체 대상으로 삼았던 이승만정부와 망쉐 정부의 경우 무엇이 유사한가보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치사회(정치변동)와 시민사회(반정부시위)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정치론적 접근의 지평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역사 방법론에서 제시되는 것으로서 차이에 대한 '대조의 방법(Skocpol 1991, 455)'을 통해 정치사회와 권력구조 및 대외관계의 상이함을 둔

보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4·19와 샤프론에서 차이의 정치동학에 주목하는 만큼이나 이 논문은 우선 정치변동의 동학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설명틀로서 국가-시민사회 이분적 틀이 갖는 이점과 제약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와 정치변동 간의 즉각적인 연관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정부 시위를 시민사회 영역으로 그리고 정치변동을 국가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이른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상호 역학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 비교정치학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일반적인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적 틀에 정치사회를 추가하여 국가보다는 특정의 정부와 정치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구조 및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의 반정부 시위의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시민사회-토대(계급적 경제사회)라는 3분론(대표적으로 유팔무 1993, 256의 그림 1)이 아니라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3분론(대표적으로 최장집 1991, 332의 표 1)²⁾을 취하게 된 이유는, 이 논문의 주제가 4·19와 샤프론 사례를 통해 반정부 시위와 정치변동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치적 설명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정부시위와 관련한 정치변동의 대상은 정부구조의 변화 내지는 정부엘리트의 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정의 제3세계 반정부 시위가 국가구조 및 계급관계의 급격한 변혁보다는 정부구조의 변화라든가 집권엘리트의 대체를 요구하는 만큼이나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직접적 대치로만 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의 작동이 어떻게 혹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특히 관련 강대국의 개입 정도에 대한 논의를 무시하고는 저발전 사회의 반정부 시위의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4·19와 샤프론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정치사회의 역동성 여부, 군부의 정치적 추이 그리고 강대국의 개입 수준에 초점을 맞춰, 왜 4·19와 샤프론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이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왜 국가(정치변동)-시민사회(민중화운동)이라는 이분적 틀이 아니라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삼분적 틀을 원용하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그 이유는 첫

2) 최장집(1991, 333)의 3분론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정치사회라는 중간 층위에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또는 독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째,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대한 손호철(2003, 57)의 문제 제기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든 문민독재정부든 그 억압성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시민사회 내부, 특히 이의 계급적 균열 속(손호철 2003, 58)"에 있다고 본다면, 국가의 억압성에 대치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민주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등식화 하는 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특정 국가 내지는 지배블록의 억압성 내지는 무능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힘의 역관계가 반정부 시위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내적 불만을 분출해 나감으로써 반정부 시위를 추동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시민사회 틀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4·19와 샤프론을 비교하면서 특정 시민사회 내부의 정치문화라든가 계급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가 특정 정부의 진퇴를 포함하여 반정부 시위의 성과를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유팔무(1993, 257)의 지적처럼, 시민사회가 단순히 '국가에 대한 저항성력'인 것만이 아니라 '시민적 생활양식'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 메커니즘'이기도 하는 다면성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연결하는 정치사회의 유용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계급 구성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분출을 담아내는 용기이자 매체로서 '정치사회'의 존재 여부와 그 역동적 역할은 반정부 시위의 정치동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가 된다는 데에서 이 논문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삼분적 틀의 유용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정치사회를 최장집(1993, 393)의 정의에 비추어, 우선 "국가와 계급,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위치하면서 "선거와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인 자율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지배 권력의 헤게모니의 기구임과 동시에 민중운동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를 민주화하고, 가능한 수준까지는 부분적으로 장악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에서의 계급과 민중을 조직화해 내고 '기대의식'을 현재화시키는 교육의 장이자 정치적 실천을 통한 정치적 매개와 여과의 장"인 것으로,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조정 능력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부과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국가에 투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정치사회에는 이미 최장집(1991, 333)이 제도권과 비 제도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선거라는 제도적 공간에 관여하고 자리하는 다양한 기구들로 확장하고자 하고, 그래서 정당

이외에도 선거에 개입하는 한 노동조합, 소수종족집단,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매체 등을 아우르는 정치적 공간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기구들을 망라하는 것으로서의 정치사회에 주목할 경우 1960년 전후의 한국과 2007년 전후의 버마는 크게 대조된다. 다시 말해서 1948년 이후 나름대로 활력을 갖고 역동성을 보였던 1950년대 한국에서는 다당제 선거와 의회라는 정치사회가 존재하면서 언제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정치적 봉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데 반해 1988년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 20여 년간 버마는 헌법과 다당제 선거 그리고 의회가 부재한 가운데 군사평의회의 포고령 통치만이 지배함으로써 이른바 정치사회의 부재로 인해 시민사회의 분출에 부응하는 정치사회의 역할은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이렇게 정치사회에 주목함으로써 4·19와 샤프론의 차이는 물론이고 향후 저발전사회에서 발생하는 반정부 시위의 촉발과 전개 및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함에 있어도 유용한 설명틀을 보다 더 적실성 있게 다듬어 내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이렇게 선거와 정당 같은 정치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은 향후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을 여는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다당제 선거를 유인하고 압박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매우 긴요하다는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특히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버마의 다당제 선거가 갖는 미래지향적 의미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4·19와 샤프론 모두에서 보듯이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는 생각만큼 국가구조를 대폭 변화시키는 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정부 시위는 국가구조와 같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보다 협의적인 것으로서 정부정책 내지는 집권엘리트의 인적 구성에서의 변화를 통해 정치적 억압을 완화하고 정치적 무능을 제거하려는 소박한 목표에 더 치중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국가와 계급 구조의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혁(Skocpol 1979, 4)”으로 파악되는 사회혁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반정부 시위의 온건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반정부 시위의 온건성에 주목하게 될수록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치를 매개하고 연결시켜 주는 제3의 영역으로서의 정치사회의 역할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물론 주기적인 다당제 선거를 통해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정치사회가 아래로부터의 향의를 조절하는 완충적 지대이자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의 본질적 보수

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³⁾ 그렇지만 정치사회는 특정의 국면에서 아래로부터의 이의 제기를 보다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담아내는 용기이면서 동시에 이를 지배블록에게로 전달해서 수용하게 하는 전동벨트로서 역할을 하는 그 실용적 유용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바로 이렇게 특정 국면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이의 제기를 온건하게 하고 수용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자 영역으로서의 정치사회는 혁명적 정치변동이 아닌 정부구조의 개편, 지배엘리트의 교체, 정부정책의 변화와 같은 수준의 정치변동을 유인하고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정치변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설명적 유용성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 논문은 4·19와 샤프론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기제로서 정치사회의 존재와 역할 못지않게 특정의 반정부시위의 전개 과정에서 군대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정치변동에 있어서 폭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긴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계급에 기초를 둔 아래로부터의 폭력을 수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폭력에 의해 수행되는 (Skocpol 1979, 4)” 사회혁명의 경우에 못지않게 민주화운동에서도 물리력 내지는 폭력의 향방은 반정부시위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임에는 제언을 요하지 않는다. 더욱이 폭력의 독점자인 국가에 대해 시민사회가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강제적 국가기구의 대표격인 군대가 아래로부터의 항의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지는 4·19와 샤프론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였다. 다만 군의 정치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운데 이 논문은 군 장교의 조합주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특정의 위기 국면에서 군 장교의 집단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군의 정치적 동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지면상의 한계는 인정해야 할 듯하다.

어떻든 저발전 사회의 반정부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초기 국면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대가 이른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하에 대중적 시위의 전개를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이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의 주장이나 이의 제기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는 의사표명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한국의 1960년 4·19와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은 곧 이승만정부나 전두환정부와의 강한 후견의존관계의 한쪽 상대방으로서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3) 또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3분론은 “계급과 경제 관련 변수를 희석화하고 설명이 정치중심적인 것(유팔무 1993, 259)”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군이 물리력 동원을 자제한 결과로서 4·19와 6월 항쟁은 권위주의정부의 퇴진이라는 반정부 시위의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이 1961년의 5·16과 1980년 서울의 봄에서 사실상 군권을 장악한 군부 실권자 박정희와 전두환을 지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1960년의 4·19와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군이 물리력 동원을 자제하게 된 배후에는 한국의 안보-경제-대외관계에서 사실상 후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주효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군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한 관련 강대국의 개입 여부는 결정적 국면에서 반정부 시위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제3세계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정치변동은 결코 그 특정 사회 내부의 변수들만이 아니라 이들 사회와 긴밀하게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나라 또는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강대국의 개입 여부와 그러한 개입의 수준도 반정부 시위의 결정 국면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19와 샤프론에서 각각 미국과 중국의 개입 여부와 방향, 개입의 수준과 강도는 이승만정부의 망췌정부의 퇴진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적-비공식적 영향을 미쳤다. 이 점에서 보면 저발전 사회의 약소국, 특히 대외관계에서 의존적 위치에 처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변동에는 후견국의 이해관계와 대외정책상의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기도 하겠다.

물론 화이트헤드(Whitehead 1987, 21)의 강조처럼, 민주화 이행에서 국제적 맥락은 많은 경우 이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며 민주화를 결정하는 가장 궁극의 결정요인은 각국의 내부과정인 것으로 일반화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주장은 자칫 해당 사회 내부의 역동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4·19와 샤프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1950년대 한국과 2000년대 버마라는 특정의 지정학 및 대외관계상의 여건과 역사·사회적 국면에서 특정의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어 나가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개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헌팅턴(Huntington 1991, 85-100)이 민주화의 제3의 물결에서 바티칸 교황청이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외부 행위자들이 민주화에 미치는 공헌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고 한 것은, 외부 후견국의 개입이라는 변수의 적실성이 크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III. 4·19와 샤프론의 차이

1. 촉발원인과 추동주체 및 정치사회의 차이

반정부 시위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변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치사회의 변화를 그 목표로 삼는다면, 그러한 반정부 시위의 기치는 불가피하게 당시 사회 내에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점에서 1960년 전후의 한국과 2007년 전후의 버마는 크게 대비된다. 그 형식성과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1950년대 이승만정부의 공식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나 2007년의 샤프론 당시 버마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은 수하르토 치하 인도네시아의 ‘뻘짜실라 민주주의’⁴⁾ 교의를 연상케 하는 ‘규율민주주의(discipline democracy)’⁵⁾이다. 이 점은 1988년 9월 88민주항쟁을 억누르면서 등장한 당시 버마군사평의회 의장인 소마웅 장군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등장한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한 이후에도 국가방위와 법·질서 유지는 계속해서 군이 담당하여 나갈 것(Guyot 1991, 205)”임을 천명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군사정부 지도자가 가운데 그 누구도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나라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교육현장 등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정치이념의 당위론적 측면과 현실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정치이념의 구체적 작동 양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비정상과 일탈이 너무나 커서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정치적 불만을 촉발제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샤프론은 군부통치의 비민주적 행태나 억압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운 버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이 축매가 되어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민생시위 성격을 더 강하게 보였다.

학생들로부터 촉발된 시작한 반정부 시위가 민중의 지지와 지식인의 참여로 확대되어

4) 뻘짜실라 민주주의(Pancasila Democracy) 교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군은 국가안보와 사회-정치-경제발전의 양 영역에서 영원한 책임을 진다(Anderson 1992, 147)”고 천명되고 있었다.

5) 버마 군사정부는 ‘규율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세세하게 보여주지 않은 채 자주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보건대 규율민주주의란 제도로서의 군부가 정당정치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수호자 내지는 지도적 역할을 맡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른바 버마식 선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양길현 2009, 268).

나가면서 결정적 국면에서 미국의 이승만 지지 철회와 그에 편승한 한국군의 정치적 중립 전지가 이승만정부가 퇴진을 하도록 4·19의 역동성을 가져온 동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4·19를 '학생과 민중의 혁명(남재희 2000, 150)'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촉발과 추동력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2010년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4월 18일 고려대 학생시위에 이어 경찰 발포로 인해 서울에서만 104명의 사상자를 냈으로써 '피의 화요일'이라 지칭되는 4월 19일의 대대적인 학생시위에 주목하여 4·19라 명명하는 데에서 보듯이, 4·19의 촉발과 선봉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컸다.⁶⁾

이렇게 학생들의 역할이 클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이후 대중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1960년 전후하여 10만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캠퍼스에서의 집회를 통해 자체 조직화가 가능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생들은 도덕성과 정치의식 면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사회부문이라고 보겠는데(김영명 1992, 207), 이들은 자유, 평등, 인권, 민주 등 서구의 진보적인 아이디어와 정치운용 방식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선진세대였다. 1960년 전후 한국사회의 학생에게 4·19를 통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여 우선 교과서에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것(남재희 2000, 151)"이었다. 물론 4·19를 촉발시키는 데서 이들 학생들의 소망과 발언권이 더욱 클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패 그리고 무능에 불만을 갖고 이를 혁파하려는 학생들의 열의와 사명감에 대해 이를 지지하고 이에 기대를 거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혁명' 차원에서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⁷⁾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1950년대 내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초등의무교육 등을 통한 공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과 지식인 등 여론주도층에서는 당위적인 것

6) 그러나 4·19에서 초기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의 기여 못지않게 이른바 '밤 시위'를 주도하면서 4·19를 한층 격화시켜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도시빈민층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업자, 피구호민 및 제3차 산업의 불완전취업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도시빈민층은 '생존 그 자체의 극한적 상황과 존재의 부동성 및 아노미 상태에서 가장 격렬하게 4·19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정용욱 1998, 251) 4·19에서 이들 도시빈민층의 역할이 컸다는 하나의 징표로 4·19 시기 희생자 18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4명이 하층노동자(61)와 무직자(33)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정창현 2006, 31).

7) 남재희(2000, 151)는 4·19에서 한국 학생들과 민중의 염원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하자는 원망만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 보다 잘 살아보자는 원망과 남북통일을 이루자는 원망 등 복합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 점에서 학생과 민중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냉소적 비판도 있었고, 또 분단과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1950년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한다는 방어적이고 반공적인 내용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측면도 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권재민의 원리, 법 앞의 평등, 다수결의 원리, 비판과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당위적 합의는 그것이 아직 일상생활에서까지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념과 의식의 한 축을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이 경호권을 발휘하여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2·4 보안법파동’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해 나가게 된다.⁸⁾ 이 점에서 1960년의 4·19가 보안법 파동을 거치면서 “이미 1958년 말에 예비되어 있었다(김경일 1998, 43)”는 지적은 그만큼 4·19가 정치적 봉기라는 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

4·19가 보다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었던 토대로서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관 내지는 언론 등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신봉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승만정부의 비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실망과 거부를 표명하였던 1960년 전후의 정치적 맥락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가 보다 역동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 전반에서 직·간접적인 연대와 여론추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언론통제가 극심한 2000년대의 버마의 경우와 비교할 때 4·19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4·19에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할 때, 그것은 언론의 대정부 비판 활동이 컸다는 점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국민들의 호응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당시 시중에서 ‘야당지여야 잘 팔린다’고 회자될 만큼 그리고 실제로 당시 대표적 야당지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발행부수가 대략 20만 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말 당시 1년 사이에 발행부수가 2~3배로 뛰었기 때문이었다(김경일

8) 2·4 보안법 파동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여당이 의회정치의 본질과 이에 고유한 합리적인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른바 ‘소수파에 대한 쿠데타적인 수단’에 호소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 감각과 도덕의식 그리고 다소라도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김경일 1998, 42).

1998, 46-47). 언론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공식적 상호 호응이야말로 샤프론을 포함하여 다른 사례의 반정부 시위와는 다른 4·19의 특성이며, 그래서 4·19는 다시 한 번 언론과 정당과 같은 민주적 제도의 존재와 이를 통해 작동을 하고 있었던 정치사회가 매 계기마다 국민과 호응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자리하기에 이른다.

주기적인 다당제 선거의 실시를 통해 정치사회가 존재하고 작동해 왔다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은 더 더욱 2000년대 버마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1948년 이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부족하나마 자유-비밀-공정한 투표의 당위론적 실천을 경험해 온 한국 국민들에게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한 중요한 계기로서 다당제 선거는 하나의 신주처럼 공식적 절차로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절차이자 관행으로서 다당제 선거를 경험하는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정부의 비민주적 선거개입 과정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하게 의무교육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배우고 수용해 나가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이승만정부에 대한 지지의 철회 내지는 다른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적 이념과 절차에 대한 국민의식의 점차적 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3·15 부정선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반이승만 시위를 대대적으로 점화시켜 나가는 결정적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1,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학원 정치도구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하면서 확대되어 나간 학생들의 항의시위는 그 이후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마산봉기로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더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그러나 4·19가 초기부터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반대와 폭력경찰 처벌 수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정용욱 1998, 243), 중국적으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이후의 정국을 허정 과도정부가 맡아 주관하게 되면서는 정치사회의 주도로 정권교체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장현규 2005, 114). 이로 인해 4·19는 보다 혁신적인 변혁으로서의 혁명적 내용보다는 정권교체라는 민주화운동에 머물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4·19에서 제도적 제약과 통제가 가능하였다는 점이 그만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4·19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1950년대 한국은 헌법과 의회가 없이 군사평의회 포고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2000년대 버마와는 달리 파행적이고 불안정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의 정치사회를 확보해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온건한 방식으로 내각제 개헌과 다당제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의 4·19가 학생들로부터 추동력을 얻었다면, 2007년 버마의 샤프론에서의 추동력은 '샤프론혁명' 이름을 통해 상징화되는 것에서 보듯이 승려집단의 대대적 참여로부터 왔다. 물론 샤프론에서도 88세대 학생들의 희생적 선봉이 주효하였고,⁹⁾ 또 샤프론혁명의 초기 단계인 2007년 8월 19일 시점에서 단순 참가자의 수로만 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학생과 일반 시민의 역할은 컸다. 더욱이 이들 400여 명의 대부분이 주부라는 것은 유류비 인상이 버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반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하면, 이는 그만큼 정치적 봉기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4·19와는 다르게 샤프론은 민생시위의 특성을 더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샤프론이 민생시위 특성을 보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2007년 전후의 시점에서도 군사정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부재 내지는 정치과정의 결핍으로부터 연원한다. 왜냐하면 1962년 이후 사실상 45년 이상 진행된 군부통치 하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제도라 할 수 있는 자유-공정한 선거를 치른 바가 1990년 단 한 번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당제 선거의 경험이 부재하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쟁점이 억압·봉쇄되어 온 버마의 특수한 상황에서는,¹⁰⁾ 군사정부의 장기 지속과 개발독재 논리에 익숙해 있는 버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식 의제로 밀어붙이기에는 내재화된 민주적 정치이념 내지는 가치관이 부족하였다. 오히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승려들에 대해 구타하고 폭행을 가하는 장면들이 불교적 신심이 큰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면서 샤프론이 진전되어 나갈 수 있었다.

더욱이 3·15 부정선거를 촉발 요인으로 하였던 4·19와는 달리 식량부족으로 촉발된 1988년의 88민주항쟁처럼 2007년의 샤프론은 유가인상이라는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제대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불만을 표출하는 민생시위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유가

9) 1988년 민주항쟁 당시 10~20대 학생으로서 88민주항쟁에 참여했고 그 이후 감시와 투옥 등으로 고초를 겪어 온 현금의 30~40대 <88세대>는 2006년의 '흰색 표현' 운동과 2007년 '마음 열기' 운동 등을 통해 버마 국민들 사이에 떠오르는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샤프론혁명'을 적극 추동해 나감으로써 그 정치적 위상을 높여나갔다(Lintner 2007, 308-309; 장준영 2009, 138).

10) 여기에는 버마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가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버마식 사회주의'라든가 '규율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공식 정치이념이자 '군의 지도적 역할'의 제도화 기반으로 삼아왔던 '사회의 군사화'도 한 몫 하였다.

인상에 항의하는 초기 민생시위 성격의 샤프론이 망쉐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데에는 4·19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민생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나가는 정부의 불감증이 크게 작용하였다. 군사정부의 관변단체인 연방단결발전협회(USDA)¹¹⁾와 ‘스완 아르신(Swan Arrshin)’이라 불리는 비공식 조직의 보안대 등 경찰이 대표적으로 2007년 9월 5일 파코쿠(Pakoku)에서 무자비하게 승려들을 폭행하고 체포함에 따른 과잉대응이 민생시위를 그 이후의 샤프론으로 치달아 나가게 만들었다.

파코쿠 승려폭행 사건 이후 샤프론의 추동력은 미얀마승려동맹(ABMA) 이름 아래 모인, 전통적인 투쟁경력을 지닌 미얀마청년승려동맹(ABYMU), 랑군을 중심으로 한 랑군청년승려동맹(YMUR), 만달레이를 발판으로 삼은 미얀마연방승려동맹(ABFMU) 그리고 최근에 조직된 청년학생승려조직(YSMO)으로부터 주어졌다(정문태 2007, 15-16). 파코쿠 만행 사고와 유가인하, 아웅산수치 석방, 야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승려들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 참여에 고무되어 88세대 학생들과 시민은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버마학생민주전선(ABSDF)이라든가 버마민주포럼(FDB) 등 버마 안팎의 정치단체와 혁명조직들이 직·간접으로 연결되면서 샤프론은 특히 인터넷과 휴대폰 전송을 통한 실시간 뉴스와 사진 전송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발생한 대규모의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는 결국 9월 26일의 비상계엄 선포 속에서 진행된 최소 200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뒤로 하고 마무리되고 말았다.¹²⁾

여기서 1988년의 88민주항쟁에 비추어 2007년의 샤프론을 조명해 보면 둘 다 민생 시위로부터 시작하여 반정부 민주화투쟁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1988년의 88민주항쟁이 1987년 7월 식량부족 사태로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쌀을 수출하는 곡창지대에서 식량부족으로 쌀 가격이 3배나 올랐다는 것은 곧 네인 군사정부의 경제적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쌀 수출의 나라에서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버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나타난 88민주항쟁은 ‘경제 문제의

11) 버마 군사정부의 자매집단인 연방단결발전협회(USDA)는 공식 회원이 버마 전체 인구 약 5천만 가운데 2005년 현재 절반에 가까운 2,280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으로 반정부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3년 드뎡인학살과 2007년 샤프론 때에서 보듯이 반정부 시위대를 저지-구타-색출-억류하는 데 동원되는 등 정권지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하고 있다 (Network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 2006, 17-18).

12) 샤프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가 15명이라고 군사정부는 발표했지만, 유엔은 “인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할 경우 최소 31명의 사망과 최소 74명의 실종 그리고 653명의 구금 (Pinheiro 2007, 20)”을 보고하였다.

정치적 해결'을 찾아나서는 것으로서 군부통치 반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988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 버마 군사정부는 쌀 가격을 통제하여 쉽게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2007년 8~9월 디젤과 고추, 휘발유, 양파 등이 50%에서 100%로 오를 때도 쌀 가격은 그대로 동결시켰다.

2007년 9월의 샤프론이 8월 15일의 유가인상으로부터 시발되었다는 것 역시 버마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버마의 연료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군사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 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휘발유 가격과 디젤 가격을 각각 67%와 100% 인상하고 천연가스(CNG)도 500%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즉각 교통비 2배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하루 벌이 1,000짖 가운데 40%를 교통비로 써야(Taylor 2008, 255)”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렇게 갑작스런 채값 물가상승이 500%에 달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¹³⁾ 이렇게 88민주항쟁처럼 샤프론도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 군부정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민생시위로부터 시작하여 버마 군사정부의 개발독재 기능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허구적인 것이어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을 표명한 민주화 투쟁으로 확산되는 유사성을 보였다.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4·19도 본질에 있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비조직적으로 움직인 시위 중심의 투쟁이었고, 뚜렷한 지도세력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정용욱 1998, 250)”된 반정부 시위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7년의 샤프론도 1988년 88민주항쟁 때처럼 어떤 뚜렷한 미래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면서 아래로부터 조직화되어 나타난 혁명적 의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마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무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의사표현이었다. 앞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 9월 25일 옛 수도 양곤에서만 10만의 시민들이 시위대에 참가했다는 것은 기존의 군부통치 방식으로는 버마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다수의 이의제기를 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샤프론은 ‘군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규율민주주의의 공식적 정치이념과는 달리 현실의 정치과정이 왜곡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13) 2005년 10월에도 버마정부는 네삐도(Nay pyi daw)로의 수도이전 경비 조달을 위해 정부공급유가를 1,000% 대폭 인상함으로써 물가폭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정범래 2007, 28).

4·19와는 달리 경제 관리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제기되는 한, 2007년의 샤프론은 부분적으로는 경제문제의 정치적 해법 찾기라는 목표를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치사회의 개편이라든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다당제 선거라는 하나의 요구사항에 집중하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7년 전후 버마는 여전히 헌법도 없고 다당제 선거를 통한 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제도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샤프론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샤프론혁명이라는 지칭 그대로 2007년 버마에서 군사정부가 퇴진하고 이어 다당제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은 혁명에 다름없는 정치변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4·19와 샤프론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헌법, 정당, 선거, 의회 등의 민주적 제도가 일정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부족하고 아쉬운 대로 이들 제도가 정치사회에서 일정하게 작동되어 나가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4·19에서 이승만대통령이 해야하고 이어 다당제 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정치과정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던 1960년 전후의 한국과는 달리, 2007년 전후의 버마는 군사정부의 포고령에 의한 통치가 이른바 '구울민주주의'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땅쉐정부가 물리력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승만정부와 '군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땅쉐정부는 반정부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열기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 내 실권자들의 정치의식과 대응방안에서도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는 전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군부 기득권에서의 차이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지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혹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반정부시위에 대처하는 군대의 입장이다. 군대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권위주의 정부가 군대를 사병화거나 혹은 '제도로서의 군부'가 '정부로서의 군부'를 겸하게 되는 경우,¹⁴⁾ 군대는 정권안보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와 의 밀착도 측면에서

14) 스테판(Stepan 1989, 57-58)의 구분을 참고하면서, 필자는 '정부로서의 군부'는 정부를 이끌고 있

보면 이승만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승만 개인의 카리스마와 지명도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과 군대 등과 같은 강제적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야당과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김영명 1992, 173)'라고 한다면, 망췌정부는 제도로서의 군부의 이익을 적극 보장하고 대변하는 정부로서의 군부이다. 바로 이와 같이 군대와의 밀착도에서의 차이는 반정부 시위가 극단으로 치달아 나가는 결정적 국면에서 군의 동원과 방관이라는 차이를 낳고, 이는 4·19와 샤프론에서 보듯이 정부의 퇴진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4·19에서의 군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당시 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데 나서지 않았을까의 설명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영향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은 '고문관'을 통해 군 장성의 인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미군 지원 때문에 한국 장교들은 심리적으로 대미의존적(한승주 1983, 51)"으로 되어 있었던 1960년 전후의 상황에서 4·19를 대하는 군 장성들의 정치적 입장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군 장성들이 미국의 입장에 편승하면서 이승만정부와 학생·시민 시위대 간의 대치에서 중립을 지키게 된 데에는, 한국군이 시위대에 발포를 감행할 만큼 '제도로서의 군부의 기득권'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컸다. 이는 1950년대 당시 서로 다른 지역과 전문적 배경을 토대로 한 분파주의가 "동경그룹, 만주파 장교들, 비일본군 출신 장교들, 북부 출신파, 남부 출신파(한승주 1983, 54)" 등으로 나뉘어 한국군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데서도 오는 것이었다.

물론 1950년대 10년 동안 군대가 10만의 군에서 60만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군은 직업장교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미군과의 접촉을 통해 급속하게 "제도적-기술적-조직적 발전(김영명 1992, 260)"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기간에 걸친 군의 양적-질적 확대 속에서 한편으로는 상급 장교들의 부패와 이들에 대한 이승만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군 내부의 부패로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갖는 소장 장교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군 고위직의 명령에 따라 군 조직상의 충성을 보일 소장 장교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정부의 부정과 무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승만정부를 지켜내려는 군 고위장교의 수도 많을 수

는 핵심 군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민간인 참모까지도 포함하는 군사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도로서의 군부'는 군정보조직, 군 위계구조, 군산 경제기구, 군민 자매집단, 군관연합체 등 다양한 형태의 군부 조직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자 하다.

가 없었다. 실제 1960년 4월 11일 홍진기 내무장관이 군 병력 동원을 요청했을 때 김정렬 국방장관은 군이 민간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는데(Kim 1983, 100), 이는 그만큼 제도로서의 군부의 이익이나 정체성이 이승만정부의 존속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1960년 4월 11일 이후 군의 중립이 일관되게 지켜지는 배후에는 김정렬 국방장관과 주한유엔사령관 매그루더 간의 합의가 깔려있었는데, 이는 4·19에 대한 미국 입장을 따르는 것이 제도로서의 군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4월 19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이 4월 20일 “경찰의 보복행위를 불허하고 연행자 중 무혐의자는 석방하겠다”고 한 데 이어 4월 21일에는 “데모대는 폭도가 아니다”고 언명을 하는 데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심재택 1983, 53에서 재인용). 또 하나의 대표적 예로 계엄군의 이러한 중립성은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1960년 4월 26일 이승만대통령과 학생·시민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데서 극적으로 나타났다.¹⁵⁾ 이렇게 계엄사령관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이승만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의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군 내부의 합의 못지않게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이 컸던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한승주 1983, 55)” 고위장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고위장교와 하급장교들 간에 일체감이나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일의 집단이 아닌 만큼이나, 한국군은 한국전쟁 이후 과대 성장해 온 지 10년밖에 안된 1960년의 시점에서 이승만정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목숨을 걸만큼의 어떤 집단적 가치와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단일의 연대체가 아니었다. 이승만대통령과의 군 고위장교들 간에 존재하는 후견수혜망은 어디까지나 정치와 군의 분리라는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기회주의적(김영명 1992, 211)”인 것이었다. 이렇게 10년 안팎의 성장을 거치면서 분파주의가 지배하는 한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2007년 샤프론에서 버마군은 45년이나 지속되어 온 군부통치하에서 집단적 기득권과 일체감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쉐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15)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주선한 대통령과 시민·학생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승만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여 재선거 실시와 이기붕 퇴진을 발표했다는 것은(정용욱 1998, 248), 4월 19일 이후의 계엄사령관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차원에서 주선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국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 자연스런 것이었다.

2007년 전후의 버마에서는 이미 군부통치가 45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군부와 정부로서의 군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군부의 집단적 이익과 정체성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1988년 88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군부의 기득권 지키기를 강제하고 나선 이후에도 20년에 걸쳐 버마의 군사평의회 정부인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모두 전·현직 군장교들의 정치-행정적 직위뿐만 아니라 제도로서의 군대의 집단적인 경제-사회적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데 혼신을 기울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샤프론에서 군의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곧 군부의 기득권을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시위대를 진압하여 군사정부를 수호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군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셀스(Selth 2002, 266-267)의 지적처럼, 제도로서의 버마 군의 통합력은 국민통합을 유지함에 있어서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는 군 장교들의 정치의식과 사명감으로부터도 나오는 것이었다. 또한 제도로서의 군부와 정부로서의 군부가 동일시되어 있는 2007년 전후 버마의 상황에서 만약 군이 권력을 잃게 된다면 이는 곧 군의 기득권 상실과 지난날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있더라도 제도로서의 군부는 정부로서의 군부인 망쉐정부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2010년 현재 13개 지역사령부의 사령관들이 각 주의 SPDC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지방정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로서의 군부와 정부로서의 군부의 일체성을 확실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버마 군부 내에 혹 갈등과 경쟁이 있더라도¹⁶⁾ 그것이 군부통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정도로 표면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장 장교들도 반정부 시위와 같은 반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경직되고 완고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향후 군부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유보로 인해 군사정부가 반정부시위에 무력감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¹⁷⁾

16) 버마 군부 내의 가장 대표적인 파벌로는 권력 서열 2인자인 마웅에와 3인자인 킨능을 주축으로 각기 다른 충성후원 관계가 수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왔지만, 2005년 킨능의 축출 이후 2007~10년 현재는 군사평의회 의장 망쉐-합동참모장 쉘망과 군사평의회 부의장 마웅에-총리 떼잉세잉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장준영 2008, 121-123).

17) 이와 관련 군사평의회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 야전사령관들의 불만이라든가 야전군과 군정보

1960년 4·19때의 한국과 비교할 때 2007년 샤프론 때 버마군이 아래로부터의 퇴진 요구에 따라 정치에서 손을 떼고 병영으로 철수하기에는 버마 군의 기득권은 이상비대화 되어 있는 게 버마의 현실이다. 버마 군부는 1962년 이후 내원의 '버마식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 국유화된 기업을 사실상 소유-운영-통제하면서 하나의 사회계급으로 자리하면서 2010년 현재까지 정경합일의 절대적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200만에 달하는 군 가족에게는 특별 학교와 병원, 주택, 상점 등의 제공을 통해서 군인들의 기득권을 경제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군대의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정부와 기업, 승려, 각종 이익집단, 심지어는 학생집단과도 전통적인 후견수혜망을 유지·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사회 내에서 군부통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약화·억제해 나가고 있다.¹⁸⁾

이렇게 제도로서의 군부와 정부로서의 군부가 일체화되어 이른바 정군분리가 쉽지 않은 버마의 현실에서 보면, 향후 버마의 민주화운동에서는 버마군의 기득권을 어떻게 존중하고 수용할 것인가의 장기적 전망에서 다당제 선거를 도입해 나가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게 된다. 이 점에서 2010년 예정되어 있는 선거의 의미는 군사정부의 퇴진이 아니라 헌법과 다당제 선거 그리고 의회구성 등과 같이 민주주의를 향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시작의 반'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규율민주주의'라는 위로부터의 제한적인 제도화 과정이 결국에는 제도와 행위간의 변증법을 거치면서 매 계기마다 시민사회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을 통한 정치변동의 역동성 창출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가 전혀 무망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4·19와 샤프론의 대비론적 교훈에서 보듯이, 일순간에 전면

국간의 알력(Min 2008, 1026-1032) 그리고 노장-소장 장교 간의 세대 차이에 덧붙여 특히 '샤프론혁명'에서 승가에 대한 탄압과 학살로 인해 야기된 친불교 장교들의 이익제기가 일사불란해 보이는 제도로서의 버마 군부 내에서 정부로서의 땅쉐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비화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Kingston 2008, 16-17)가 있는가 하면, 또 제도로서의 군부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소장 장교들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채 75세 고령의 땅쉐가 자의적으로 주도하는 군사정부를 교체 내지는 쇠신해 나가려 할 수도 있다는 견해(Hutt 2007)도 있다.

- 18) 버마의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 학생, 승가, 농민과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후견수혜망은 우주의 의회민주주의와 내원의 버마식 사회주의 그리고 그 이후 군사평의회(SLORC/SPDC)에 의한 규율민주주의 모두에서 변함없이 관통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부의 시민사회 장악과 세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흘랭(Hlaing 2007, 213-254)을 참조.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흘랭의 연구는 이러한 후견수혜망의 버팀목이 군사정부의 위협과 강압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주고 받기식 교환적 후견수혜망은 주고 받기가 깨어지면 언제든 무너지게 될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군사정부의 퇴진이 더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헌법, 다당제 선거, 의회 등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는 정치사회의 출현 이후에야 비로소 아래로부터의 압력 내지는 국민들의 힘의 동원을 통해서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보다 더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3. 후견국의 개입 차이

4·19에서 미국의 개입은 결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195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미국이 이승만 정부의 생존에 지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19에서의 미국의 개입도 그 자체가 미국의 대한정책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의 대한정책이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을 잇는 지역통합(정용욱 1998, 252)”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승만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걸림돌이 된다고 간주될 때마다 이를 교체하려는 의도를 주기적으로 보여 왔다. 1950년대 동안 미국은 처음에는 이른바 ‘자유당 온건파’라 지칭되는 이기봉 중심의 전문 관료집단에 주목하다가 후기에는 조병옥 등 민주당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국의 정치안정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관심과 개입을 해 왔는데, 4·19를 전후한 미국의 이승만 절연정책은 4월 26일 보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미국의 정치개입을 통해 극적인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로 최종 마무리 되었다(이완범 2007, 162-166).

이렇게 한국이 ‘민주주의의 진열장’으로서 역할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대한정책은 민주주의의 수출이라든가 인권개선이라는 이념적-정치도의적 목표의 실현에 앞서서 반이승만 정책을 펴더라도 그것이 미국 대한정책의 제일차적인 목표인 ‘동맹체제의 안정’에 위촉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 더 크게 의존하면서 추진되어 나갔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48년 이후 혹은 더 중요하게는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싫든 좋든 미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일차적으로는 친미적이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친미적이지만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이었기에 미국에게는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승만정부를 지탱해 나갈 유인이 그만큼 적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외교·경제적 지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전달이었기 때문에, 이는 4·19의 단기적 성공을 가능케 하는 대외

관계적 배경이자 맥락을 넘어서서 1950년대 미국에 크게 의존적인 만큼이나 한국 사회가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압박하는 구조적 힘으로 작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전략상의 안보적 목표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로 인해 군사독재를 용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나 1979년의 12·12 하극상 쿠데타 때에서 보듯이, 미국은 초기에는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정권장악 방식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이 물리력에 의한 기존 질서의 안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미국은 곧 자국의 세계전략상의 안보적 목표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로 인해 군사독재를 용인해 주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도전으로 인해 제3세계 친미독재정부에서 권력승계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미국은 파스토(Pastor 1991)가 얘기하는 ‘혁명에 대한 선점전략’으로 미국과 동일시하던 독재자와 절연하여 온건한 제3세력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4·19는 그 대표적 사례였다(이철순 2007, 123). 그렇게 본다면 4·19에서 미국의 이승만 지지 철회는 제도로서의 군부의 중립 표명과 동전의 안팎을 이루면서 이승만정부의 퇴진을 가져온 최종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4·19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란, 미국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의존 수준이 큰 만큼이나 특정의 위기 시에는 그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전쟁의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준 이후 줄곧 안보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크게 의존하는 1950년대의 안보적 취약 상황에서 이승만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로 인해 군부마저 중립을 지키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경찰력만으로는 이승만정부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1954-60년까지의 7년 동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8억 8,900만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어서 ‘미국원조 없이는 한국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김경일 1998, 25). 이러한 원조의 상당 부분이 전후복구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재정적자 충당과 인플레이 수습에 쓰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승만대통령에게는, 4월 26일 매카나기(Walter P. McConaughy) 주한미대사가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 주한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이승만을 방문하여 대통령의 하야를 종용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권좌에 눌러 앉아 있을 권력의지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2007년 샤프론이 일어날 때 버마의 군사정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재정적 의존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EU 등 서방세계와 국제사회가 아무리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해도 어려움은 있지만 홀로 서는 게 가능할 수 있는 자율적 영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시에 지난 20년간에 걸친 버마의 대외관계를 보더라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등 주변 국가들이 버마와의 경제교류로부터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 버마 군사정부의 실책이나 인권탄압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버마 군사정부가 미국이나 EU 등 서방권의 경제적·외교적 제재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버티어나가는 것은 가능했다.

북한의 경우와 유사하게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과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방권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티어나갈 수 있는 버마 군사정부의 생존력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버마정부의 고립성 내지는 자립성에서 오는 것이었다. 샤프론과 비교할 때 4·19를 포함하여 1998년의 인도네시아 민주화시위나 1988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 등 반정부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가 세계경제에 개방되어 있고 특히 미국과의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불균형의 의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2007년 샤프론에서는 외국의 개입이 작동하기가 어려운 대표적 사례이다. 샤프론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적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버마-미국 관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버마는 북한과 더불어 미국이 직접적으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데서 온다. 여기에 덧붙여 버마의 정치변동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넘어 오히려 외교-경제-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버마 군사정부를 옹호·지원해 주는 한,¹⁹⁾ 군사정부가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구애받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샤프론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기가 그만큼 용이했다. 1962년 이후 군사정부가 줄곧 폐쇄적 대외고립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88버마민주항쟁 이후에도 미국은 버마에 대해 경제적 제재 및 봉쇄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버마정부를 압박할 지렛대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었다.²⁰⁾

19) 대표적으로 2003년 7월 미국의 대버마 전방위 수입금지로 인해 약 3.5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자 중국은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버마 군사정부의 대외적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Holliday 2005, 615-616).

20) 이 점에서 보면 하케(Haacke 2006, 8)의 지적처럼, 대버마 경제제재 정책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버마는 미국이 중국과 인도, 아세안, EU, 일본 등과의 다자간 공조를 통해 버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다자접근(multilateral approach)의 시험대가

그러나 버마 사회 내의 정치변동과 관련한 미국의 세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마냥 적다고만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버마의 지정학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해협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친미적 정부가 버마에 들어서면 것은 남아시아에서의 중국전제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크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버마의 석유 특히 천연가스 투자에의 접근도 그만큼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Engdahl 2007, 172-177). 이 때문에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전국민주의재단(NED)'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샤프론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버마와 중국 간의 군사·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는 한,²¹⁾ 버마 군사정부를 교체하기 위한 미국의 대대적인 개입이나 군사적 압박은 쉽게 가동되기가 어렵다. 샤프론이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된 것은, 사실상 중국과 안보·외교·경제 등 제 방면에 걸쳐 후원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버마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었다.²²⁾

4·19와 샤프론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후견국이 한국과 버마라는 의존국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이를 지지 혹은 거부 또는 유보 등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성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이웃 강대국과의 종속관계가 강할수록 의존국의 정치적 자율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강대국이 의존국의 정치변동을 얼마나 수용하느냐는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민주화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국가들이 규모가 크고 강대한 국가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이들 소규모 국가의 정치적인 결정적 요소가 그들 영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Moore 1985, 7)”는 뜻이기도 하다.

4·19에서 미국의 반이승만 입장과 샤프론에서 중국의 친(親)땅쉐 입장은 적어도 특정 정부의 진퇴를 좌우하는 데 제도로서의 군부의 입장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되고 있다.

- 21) 버마 땅쉐정부에 대한 중국의 연대적 지원과 투자협력은 전투기와 탱크, 지대공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원조를 공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들여 ‘버마를 가로질러 벵갈만의 시트웨(Sittwe)에 있는 윈양 항구에서 중국 운남(Yunnan) 지방의 쿠밍(Kuming)까지 대략 2천3백 킬로미터 이상의 중국-버마 간 석유 및 가스용 파이프라인(Engdahl 2007, 177)” 건설에 이르기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긴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22) 중국과 버마 간의 안보-외교-무역-투자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중국은 버마에 대해 ‘형님국가’(senior state)로 그리고 버마는 중국에 대한 ‘의존국가(client state)’로 후원의존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케(Haacke 2006, 25-32)를 참조.

다. 이 점에서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대국의 개입은 결코 이차적인 변수만이 아닌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다. 다만 영향력의 시간대에서 있어서 정치변동을 낳는 일차적인 문제 제기는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의 역동성으로부터 오고, 그 이후 후견국의 개입 여부 내지는 개입 정도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시간 차이는 존재한다.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대외개방의 정치경제적 맥락으로부터 제기되는 구조적 압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일수록(1990년대 인도네시아), 또는 해당국가가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이웃 후견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혹은 그 후견국과의 상호작용이 긴밀한 국가일수록(2000년대 버마), 그리고 후견국과 긴밀하게 안보·경제적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일수록(1950년대 한국), 특정의 반정부 시위라는 국내적 사건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후견국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IV. 나오면서

권위주의 정부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권위주의의 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기능적 효용성에 기반을 둔 군부통치는 조만간 퇴진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1988년의 88민주항쟁을 포함하여 중남미 등 제3세계 일반의 개발독재 사례에서 보듯이 기능적 효용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군사정부가 무능한 것으로 거부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1987년의 한국과 1996년의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권위주의가 기능적 효용성을 이룬 경우에도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민주정부를 찾아나서는 시민사회로부터 군사정부는 강력한 퇴진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4·19와 샤프론의 대비에서 보듯이 권위주의정부가 퇴진하는 데는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로만은 부족해 보인다. 이 논문은 정치사회의 존재 여부, 제도로서의 군부의 기득권 수준 그리고 후견국의 개입 정도라는 3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정부교체까지도 의도하는 빈정부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19가 이승만정부의 퇴진을 결과했듯이, 버마의 88민주항쟁은 네윈정부의 퇴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샤프론은 정부교체를 유인하는 데는 실패했고, 다만 2008년 헌법재정과 2010년 선거 예정 등과 같은 정치일정의 제시를 가져오는 데로 이어졌다.²³⁾ 이는

23) 그러나 2008년에 통과된 헌법안에 마치 한국의 유신시대 유정회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의석

88버마민주항쟁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1990년 다당제 총선과 개방경제를 제시했던 경험의 재판이기도 하다.

4·19는 장면정부의 등장이라는 정권교체까지로 이어졌는데 반해 88민주항쟁에 이은 1990년 선거와는 달리 샤프론에 이은 2010년의 선거에서 아웅산수치의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망쉐정부가 여전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도 군부가 공식 정치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변화도 무망하기 때문이다.²⁴⁾ 결국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가 민주정부의 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함을 4·19와 샤프론의 경험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동시에 군부의 동향과 후견국의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권위주의정부의 퇴진을 가져올 것인가의 역동적 과정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미로 찾거나 다름없는 데, 그 하나의 이유는 반정부 시위 전개는 그 자체의 역동성과 우연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변수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4·19와 샤프론을 대비하면서 보다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2010년대 버마의 정치변동 가능성을 예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향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버마의 반정부 시위에서 그 역동성은 승려들의 동참 여부에 달려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4·19 때의 한국의 군과는 다르게 제도로서의 버마군의 기득권이 오랫동안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를 깨뜨릴 만큼의 힘을 승려들이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승려들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반정부 시위가 향후에도 자주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4·19 때의 미국의 반이승만 입장과는 달리 버마 군사정부의 후견국인 중국이 이러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데서도 버마 군사정부의 생존 가능성은 높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0년 예정된 다당제 총선이 갖는 의미는 4·19를 통해 장면정부의

의 25%를 군인이 차지하고, 비상시 군부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는가 하면 아웅산수치의 출마를 봉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민족민주동맹(NLD) 등 버마 반정부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헌법안의 비민주성과 기만성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4) 그러나 1960년 이승만의 경우가 나이가 84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에 이승만 이후를 고려하는 국내외의 기획이 자주 제기되는 만큼이나 버마의 경우도 망쉐 군사평의회 의장이 2010년 현재 70대 중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5~10년 안에 망쉐 이후의 버마 군부의 미래를 기획하는 움직임이 군 내부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아 무방하며, 이 점에서 2010년 선거는 망쉐 이후의 규율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나갈 하나의 방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출범을 가져왔던 경험처럼 그것이 정권교체를 가져온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²⁵⁾ 이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다당제 선거와 의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치사회가 가동됨으로써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를 토대로 한 진지전 방식의 민주화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²⁶⁾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버마의 민주화를 의도하는 외부적 개입의 한 역할로서 미국은 종래와 같은 경제제재가 아니라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다면적이고 협력적인 이른바 '버마 포용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때 오히려 향후 버마정세에 대한 영향력 증대 및 개입 지렛대를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볼 것이다.

투고일 2010년 5월 10일

심사일 2010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2일

참고문헌

- 김경일. 1998. "1980년대 후반의 사회이념: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서울: 오름.
- 김영명. 1992. 『한국 현대정치사: 정치변동의 역학』, 서울: 을유문화사.
- 남재희. 2000. "4·19학생민주혁명." 『관훈저널』 75호.
- 손호철. 2003.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서울: 사회평론.
- 심재택. 1983. "4월혁명의 전개과정." 한완상·이우재·심재택 편. 『4·19혁명론 I』, 서울: 일월서각.
- 양길현. 2004. 『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 서울: 살림.

25) 2010년 5월 6일까지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총선 참가를 위한 정당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정당 해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를 통한 민족민주동맹(NLD)의 정치사회 진입은 무산된 채 군사정부와 아웅산수치간의 대치가 계속 되고 있다.

26) 이 점은, 홀리데이(Holliday 2008)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총선을 통해 성립될 정치 질서가 땅체 이후에 — 예를 들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일지라도 1990년 선거 이후 20년 지난 2010년에야 겨우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다시 20년 이상이 지나서 — 버마군이 민주화 이행을 의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 _____. 2009. 『버마 그리고 미얀마: 네인과 아웅산수지』. 서울: 오름.
- 유팔무. 1993.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경남대극동문제연구원 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서울: 나남.
- 이민호. 2001. “세계체제와 4·19혁명.” 『통일로』 4월호.
- 이완범. 2007.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세계정치』 28집 2호.
- 이철순. 2007. “부산정치파동과 국가보안법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비교.” 『세계정치』 28집 2호.
- 장준영. 2009. “미얀마의 신군부와 정치변동: 군부의 정치권력과 민주화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장현규. 2005.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 1960년 4.19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 『정신문화연구』 28권 4호.
- 정문태. 2007. “버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한겨레21』 679호.
- 정범래. 2007. “미얀마(버마) '샤프론혁명'의 현장을 가다.” 『노동세상』 6호.
- 정용욱. 1998. “이승만정부의 붕괴(3. 15~4. 26): 이승만정부의 대응 및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서울: 오름.
- 정창현. 2006. “4·19, 민주주의의 혁명인가?” 『기억과 전망』 14호.
- 최장집. 1991. “민중 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 6호.
- _____. 1993. 『한국 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 한승주. 1983.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종로서적.
- Anderson, Benedict. 1992. “오래된 국가, 새로운 사회: 비교사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 인도네시아의 신질서.” 동남아정치학회 편역. 『동남아 정치와 사회』. 서울: 한울.
- Engdahl, F. W. 2007. “버마 민주화운동의 이면: 미국-인도 vs 중국-버마.” 『말』 258호.
- Guyot, D. 1991. *Policing as Though People Matt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Haacke, Jurgen. 2006. *Myanmar's Foreign Policy: Domestic Influences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Adelphi Paper 381. London: Routledge.
- Hlaing, Kyaw Yin. 2007. “The Politics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Burma.” *South East Asia Research* 15. No. 2.
- Holliday, Ian. 2005. “Rethinking The United States's Myanmar Policy.” *Asian Survey* 45. No. 4.
- _____. 2008. “Voting and Violence in Myanmar: Nation Building for a Transition to Democracy.” *Asian Survey* 48. No. 6.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utt, Ye. 2007. November 20. "New Generation of Tatmadaw Officers Needed to Promote Change." http://www.asisobserver.com/index.php?option=com_fireboard&Itemid=453&id=3923&catid=3&func=fb_pdf.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05/15.
- Kim, Quee-Young. 1983. *The Fall of Syngman Lee*.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Kingston, Jeff. 2008. "Burma's Despair." *Critical Asian Studies* 40. No. 1.
- Lintner, Bertil 저. 이희영 역. 2007. 『아웅산수찌와 미얀마군부: 45년 자유 투쟁의 역사』. 파주: 아시아네트워크.
- Min, Win. 2008. "Looking Inside the Burmese Military." *Asian Survey* 48. No. 6.
- Moore, Barrington 저. 진덕규 역. 1985.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울: 까치.
- Network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 2006. May. *The White Shirt: How the USDA will be the new face of Burma's dictatorship*. <http://www.burmacampaign.org.uk/reports/USDA.pdf>.
- Pastor, Robert A. 1991. "Preempting Revolutions: The Boundaries of U.S. Influence." *International Security* 15.
- Pinheiro, Paulo Sergio. 2007. December 7.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A/HEC/6/1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mandated by resolution S-5/1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fifth Special Session. <http://appartnership.googlepages.com/PinheiroReport-Dec07.pdf>.
- Selth, Andrew. 2002. *Burma's Armed Forces: Power without Glory*. Norwalk, CT: East-bridge.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저. 박영신 · 이준식 · 박희 역. 1991. "역사사회의학의 쟁점과 전략." 『역사사회의학의 방법과 전망』. 서울: 민영사.
- Sorensen, Georg 저. 김만흠 역. 1994. 『민주주의와 민주화』. 서울: 풀빛.
- Stepan, Alfred C. 저. 이수훈 · 김기석 역. 1989. 『군부정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열음사.
- Taylor, Robert H. 2008. "Myanmar in 2007: Growing Pressure for Change but the Regime Remains Obdurate." *Southeast Asian Affairs*.
- Whitehead, Laurence. 1987. "민주화의 국제적 측면." Guillermo A.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편. 염홍철 역.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서울: 한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fferent Political Dynamics between the April 19 Demonstration of South Korea in 1960 and Saffron Revolution of Burma in 2007

Gil-Hyun Yang | Jeju National University

Mo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usually aim at accomplishing such targets as the restructure of the government, the circulation of governing elites and the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This paper intends to highlight several factors which might have caused the April 19 democratization movement happened in South Korea in 1960 and the Saffron Revolution occurred in Burma in 2007 into different results, beyond noticing above-mentioned common goals that each of the two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would have achieved.

Having compared the April 19 Demonstration and the Saffron Revolution, the paper focuses on the differences observed in the structural make-up of political society and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relatively unique foundation in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relations. The paper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the three structural factors — the vitality of political society, the level of politicization of the military corps,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foreign power — in explaining the different results of the two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paper pursues for widening the frontier of comparative study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society (political change) and civil society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ungman Lee government and the Than Shwe government.

Keywords: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April 19 Demonstration, Seungman Lee

government, Saffron Revolution, Than Shwe government, political society, politicization of the military corps, patron-client relationship